투고

일선 환경경제과장의 바람

국가의 현안사항은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이다. 우선 경제정책조정회의 조직을 보면, 재정경제부 장관과 13명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환경부 장관이 9번째에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환경부서도 잘 만하면 경제부서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사회문제로 표출된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놓고 보면, 환경전문가는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고 경제 전문가는 그 반대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하나의 사회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환경전문가와 경제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은 환경경제학의 마인드가 신세대영역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환경경제학의 현실 적용이 문제가 되므로 지난 1월23일 동구 안으로 환경경제과로 동구 의회를 통과하고 2월17일 공포하였으며, 3월1일부로 동구 환경경제과장으로 발령받았다.

초대 환경경제과장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산시의 환경국을 환경경제국으로의 조직개편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환경친화적 개발은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할 때 가능하고, 바람직한 환경영향평가의 시범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0년전부터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의 면적의 50.7%인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이 지역 중 25가구수 이상 사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해제하는 줄 알고 있고, 농경지는 그대로다.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는 곳은 우선 개발할 환경용량을 결정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한 후 아파트 건축허가시 정화시설없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 처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하는 환경설계가 필요하고 강제적으로 못하므로 정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100만원이 소요할 경우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95만원을 부담하는 규정을 두고 건축주가 정화시설 설치여부를 선택하여 결정한다면 참여하는 행정이 될 것이다. 면제된 정화시설 몫을 하수처리장 건설비로 충당하면 될 것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중 농경지는 100㎢의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부산에서 이주한 1,300여 공장들도 경남 지역의 농공단지에 이전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노동력이 있는 부산에서 적극적으로 전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업지역을 할 경우 도심 재개발로 인하여 대체부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재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도심재개발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등은 소각하고 발생되는 열에너지는 공장에 공급하고, 공장폐수는 산성폐수와 알카리폐수를 조화롭게 공장배치를 효율적으로 환경설계를 한다면 개인의 공장에서 무단 방류하여도 공동처리하면 자동적으로 중화(中和)가 되는 이점이 있다. 또, 공장 폐열도 쇠를 녹이는 높은 열이 필요로 하는 공장은 쇠를 녹일 수 없는 열은 용도가 없어 버리게 되는데 이 높은 폐열은 인근 저온 공장에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한다면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설계를 한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 사람의 모든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최종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에 산업입지심의회 심의 자료를 제출하고, 30년전에 개발제한한 지역의 해제는 단순히 건의보다 중앙행정기관에 심의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쌀이 남음으로 대통령께서 새만금 개발은 농지보다 공업단지 용도를 제시하였듯이 김해평야를 국제적인 환경친화적 공업단지로 조성하자.

부산 동구 환경경제과장 안 경 문